

디지털 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Presented by

Research  Research

Marketing Research • Politico-Social Poll and Consulting • ISO 9001 Certified Company • Exclusive Licensee of ZMET

Contents

● 01. 조사 설계

조사 설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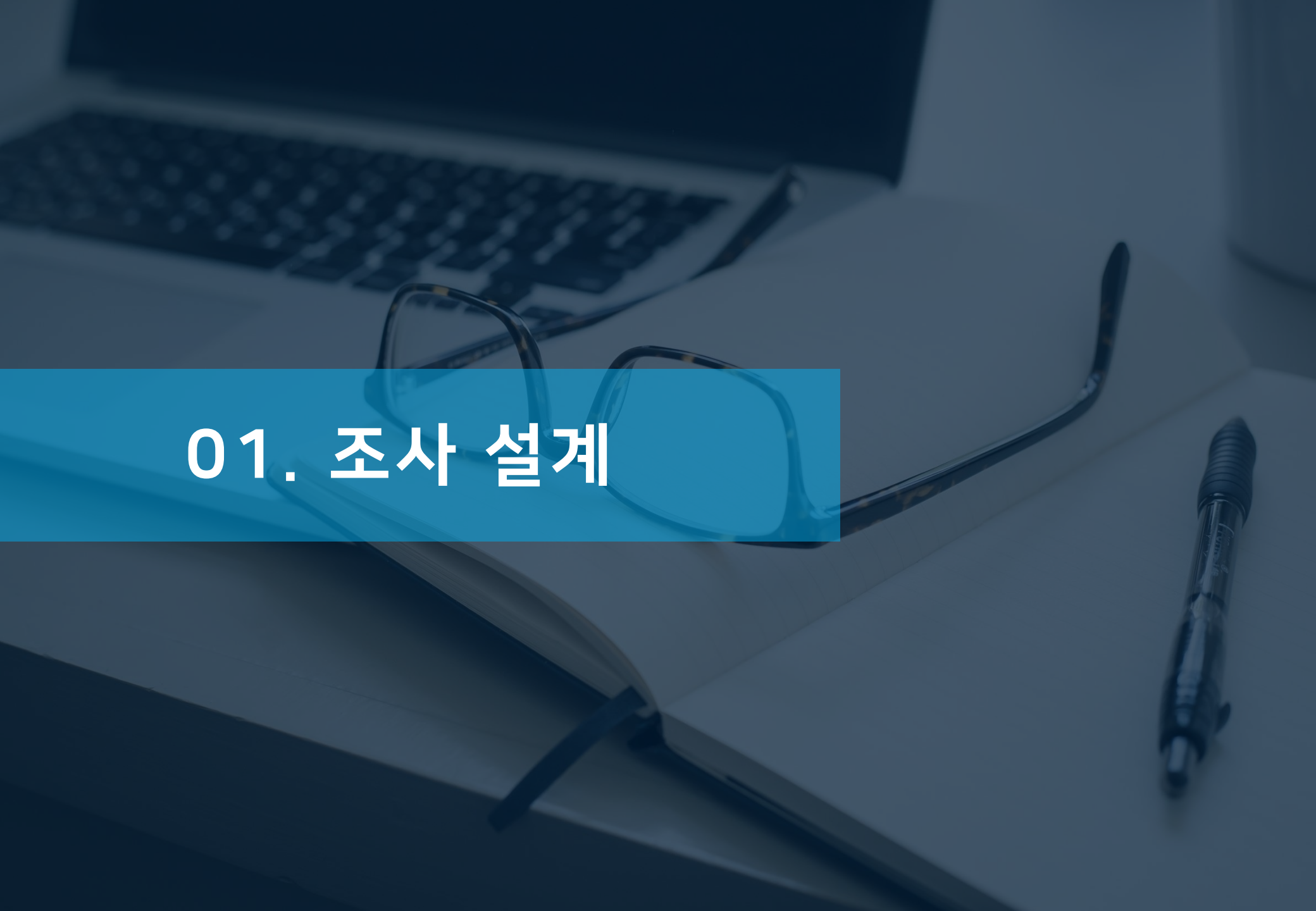
● 02. 조사 결과

1. 부문별 향후 일자리 전망 및 경제발전 기여도 ----- 6
2. 4차 산업혁명 중요도 및 공약 중요도/시급도 ----- 8
3. 과거 대비 이번 정부의 디지털경제 추진 전망 ----- 11
4. 해외 진출 계획 및 진출 지역 환경 평가 ----- 13
5. 개선 필요 규제 심각성 및 해소 시기 인식 ----- 15

● 03. 조사 결과 요약

조사 결과 요약

21

A background image of a desk setup. In the upper left, a laptop keyboard is visible. In the center, a pair of glasses with dark frames and light-colored lenses rests on a white, lined notebook. To the right of the notebook, a black pen lies horizontally. The entire scene is overlaid with a semi-transparent blue filter.

01. 조사 설계

정량과 정성의 복합 설계, 산업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 대상 조사를 병행

본 조사는 “전문가+국민”, “정량+정성”의 복합설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

구 분	일반 국민	산업계 전문가	
	정량조사	정량조사	정성조사
조사대상	19-59세 남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등 관련 기관 회원사 대표/관계자	
유효 표본 수	1,000명	152명	5명
조사방법	E-mail을 통한 온라인조사 (On-line Survey)	E-mail을 통한 온라인조사 (On-line Survey)	개별심층면접 (IDI: In-Depth Interview)
표본추출방법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추출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전수 컨택 후 유효 표본 추출 (단체별 동일 비례로 가중처리)	각 단체별 1명 할당
표본추출틀	리서치앤리서치 온라인 패널	각 단체 제공 리스트 (보안 문제로 K스타트업포럼 및 유관 협회 단체에서 직접 발송)	
조사 기간	17. 9. 11~15	17. 9. 8~29	17. 9. 25~29

0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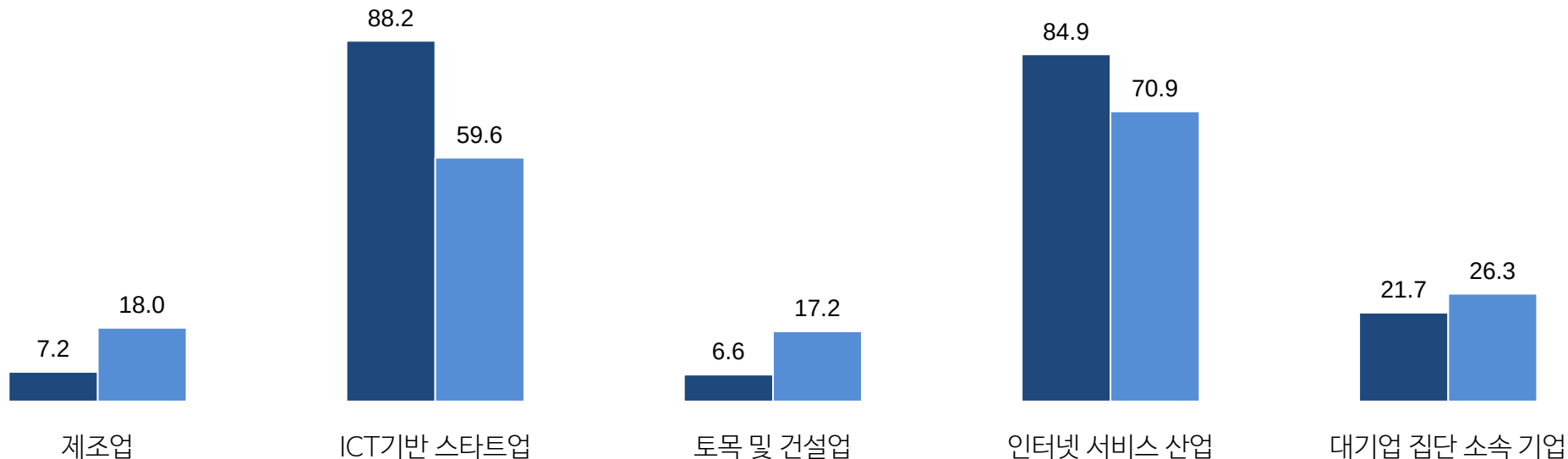
- 01. 부문별 향후 일자리 전망 및 경제발전 기여도
- 02. 4차 산업혁명 중요도 및 공약 중요도/시급도
- 03. 과거 대비 이번 정부의 디지털경제 추진 전망
- 04. 해외 진출 계획 및 진출 지역 환경 평가
- 05. 개선 필요 규제 심각성 및 해소 시기 인식

신규 일자리 전망

산업계 전문가, 향후 일자리 증가 산업 분야로 ICT기반 스타트업 분야가 88.2%로 가장 높고
일반국민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산업 분야가 70.9%로 가장 높음
산업체와 일반국민 모두 제조업과, 토목 및 건설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Q. 귀하께서는 향후에 아래 산업 부문 각각에서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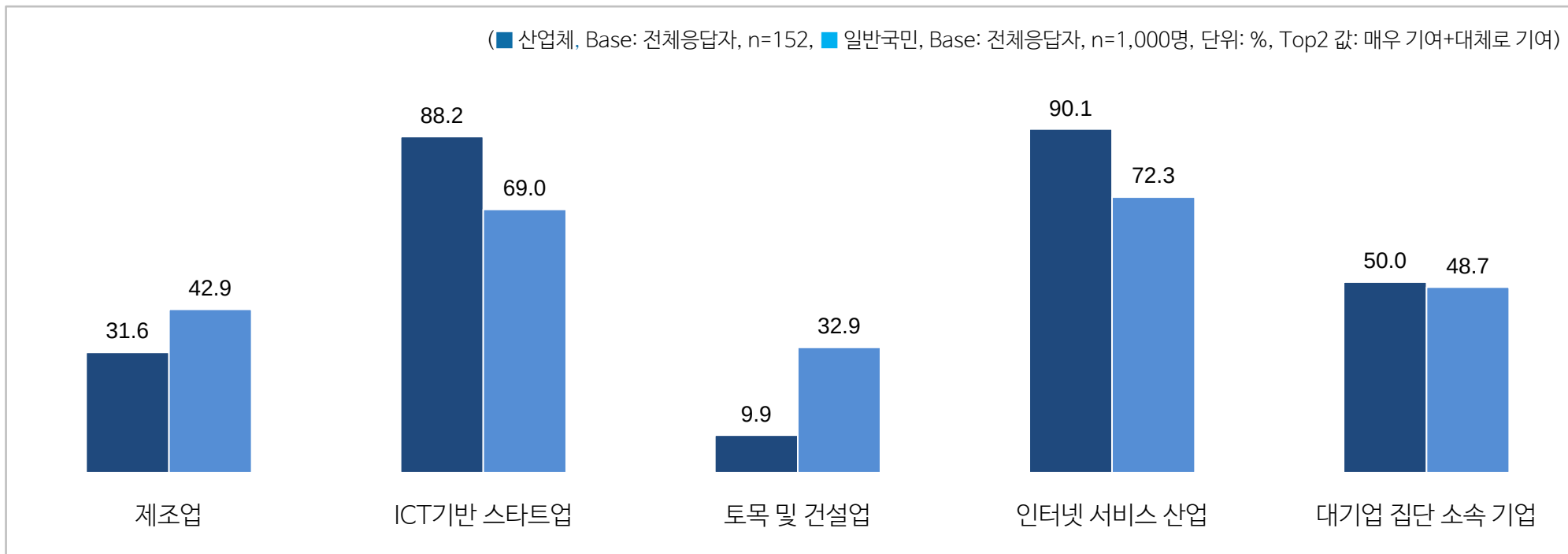
(■ 산업체, Base: 전체응답자, n=152, ■ 일반국민, Base: 전체응답자, n=1,000명, 단위: %, Top2 값(매우 증가+대체로 증가))



경제발전 기여 평가

산업계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향후 경제발전 기여 산업 분야로
ICT기반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토목 및 건설업 분야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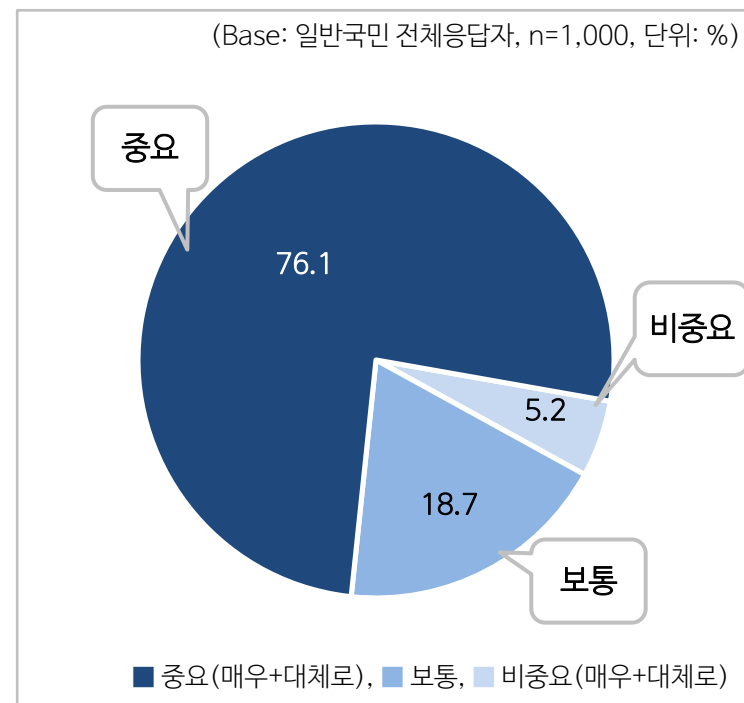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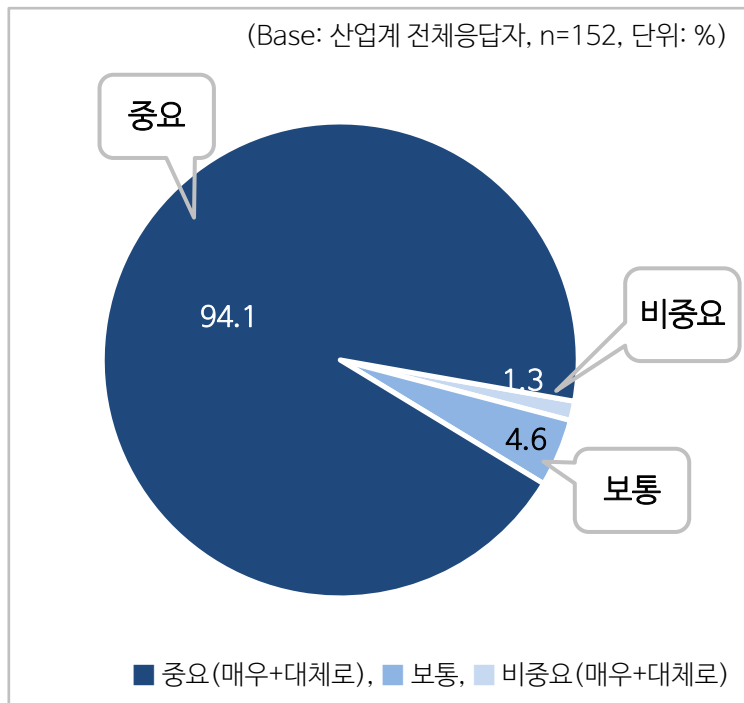
Q.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향후 아래의 각 산업 부문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 중요도

산업계 전문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하다 94.1%, 일반국민 76.1%
4차 산업혁명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산업계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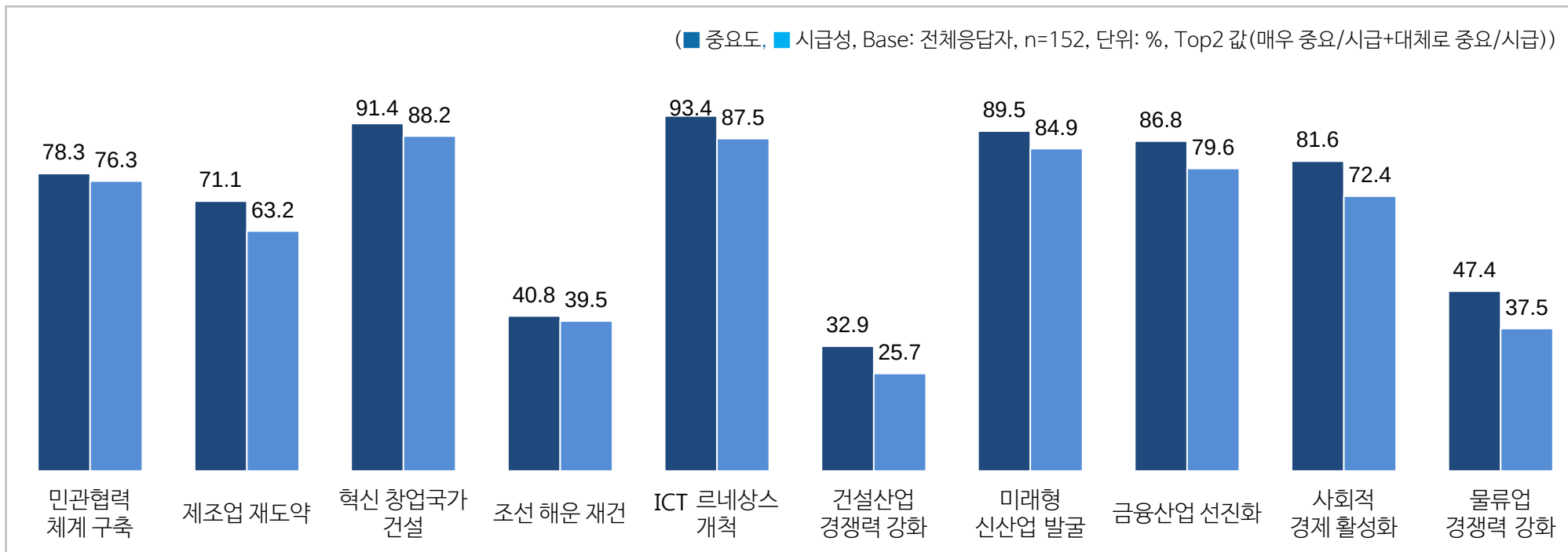
Q. 귀하께서는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혹은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약 중요도/시급도

“조선/건설/물류” 등 전통 산업 관련 공약에 대한 중요 및 시급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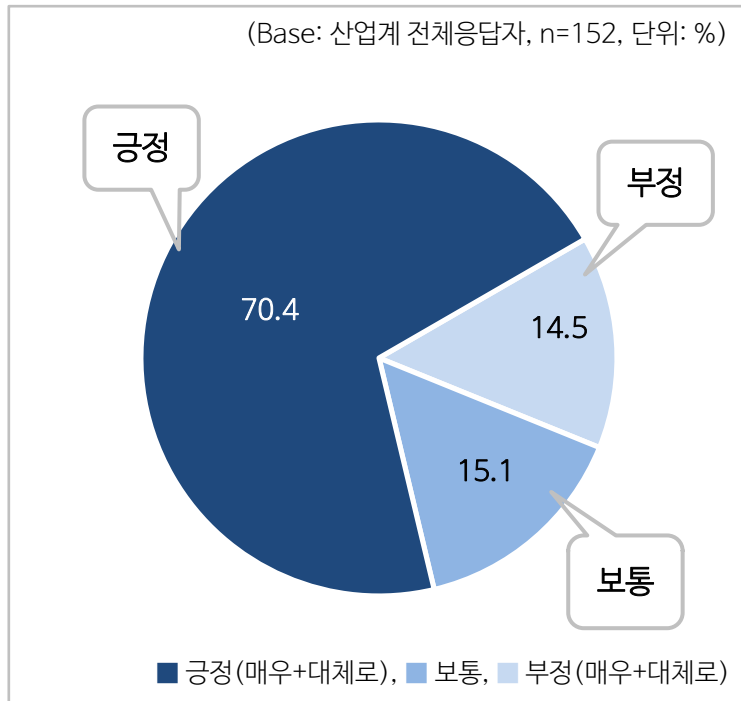
Q. 다음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산업 관련 주요 10개 공약입니다. 다음 공약이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한지(시급한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부 주요 10대 공약 수행 전망

‘정부가 앞으로 10개 공약을 잘 수행할 것 같다’ 70.4%,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 14.5%
-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이유: 전문성이 부족해서 등

Q. 귀하께서는 위의 주요 산업 관련 10개 공약을, 정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잘 수행할 것 같은가요, 혹은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가요?



Q. 잘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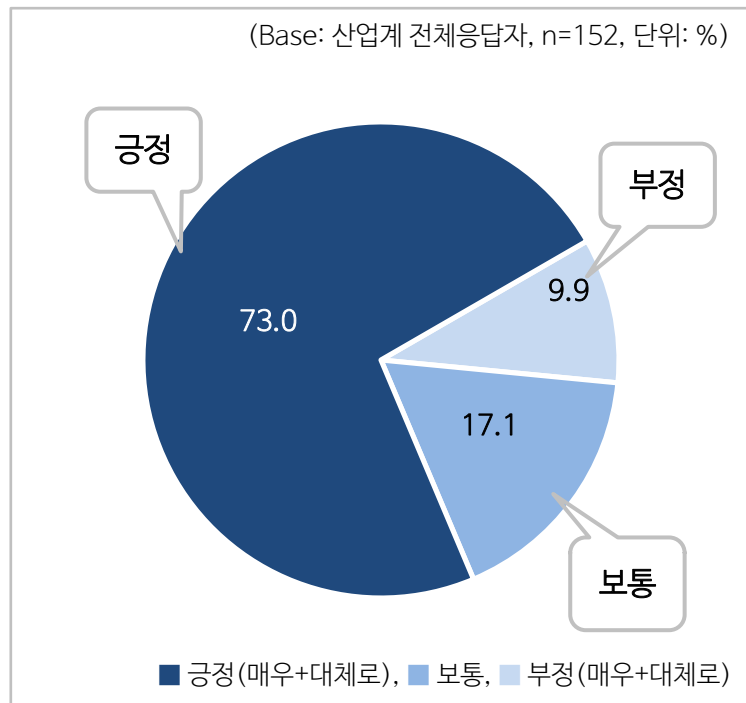
(Base: 부정 평가 응답자, n=22, 단위: 명)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이유	빈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11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서	2
간접 지원이 필요해서	1
국민 공유가 필요해서	1
정치권의 반대로 인해서	1
유리 천장이기 때문에	1
조직이 관행에 젖어있어서	1
집중할 수 없어서	1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1
포퓰리즘 공약이라서	1
없음	1
전체	22

‘신규 창업 및 혁신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 정책 추진 전망

‘정부가 과거보다 “신규창업 및 혁신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다’ 73.0 %
 잘 추진할 것 같은 이유는 산업계 전문가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기존 정권대비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 등의 이유로 나타남

Q. 과거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번 정부가 "신규 창업 및 혁신
 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추진을 어느 정도
 잘 할 것으로, 혹은 잘못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Q. 잘 할 것으로 응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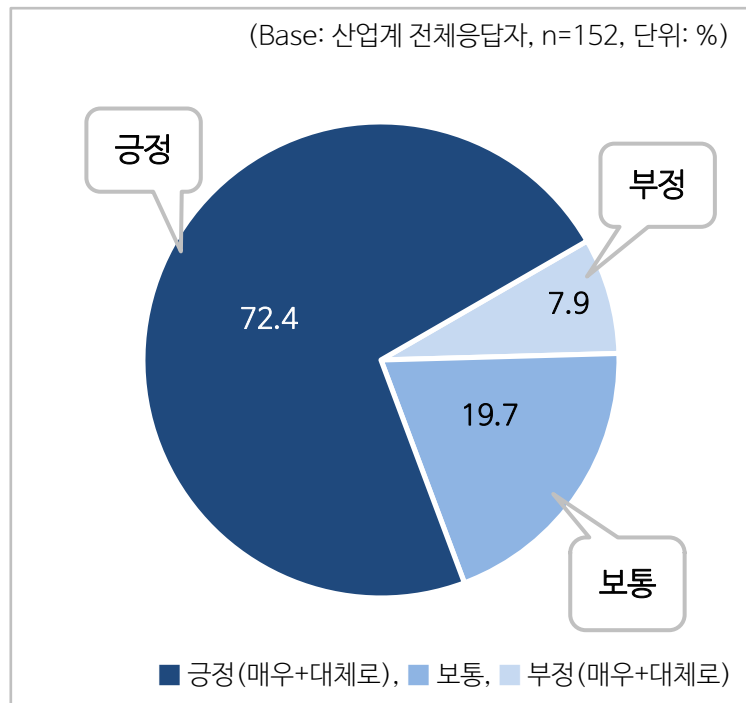
(Base: 긍정 평가 응답자, n=111, 단위: 명)

잘 할 것 같은 이유	빈도
정부를 신뢰해서	30
기존 정권대비 나아진 것 같아서	21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16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 같아서	12
원활하게 소통을 하여서	8
관련 부처를 승격시켜서	7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4
국민이 지지해서	3
적폐 청산을 할 수 있어서	3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서	2
공약 및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1
국제 사회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1
여러 담당자를 포용하기 때문에	1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1
없음	1
합계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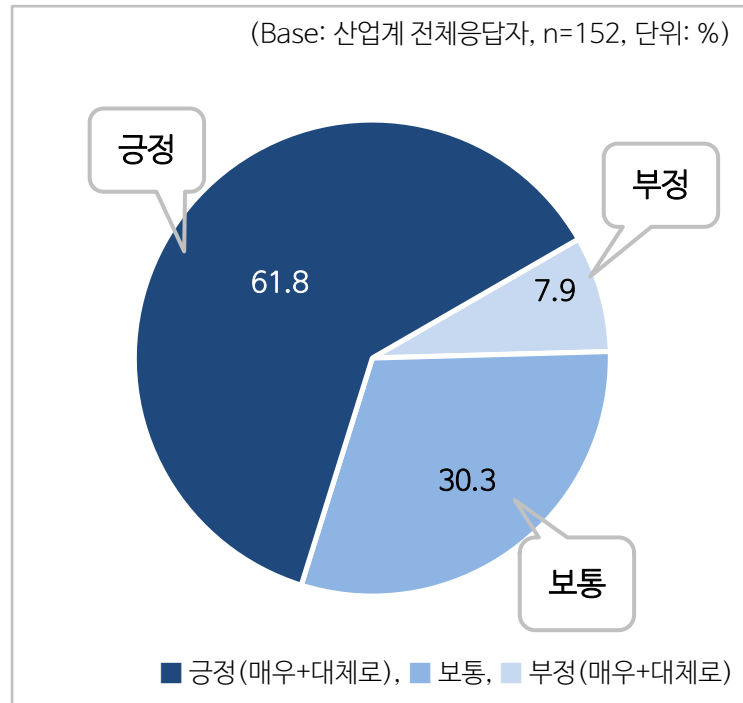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규제개선’ 추진 전망

‘정부가 과거보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다’ 72.4 %
‘정부가 과거보다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개선”을 잘 추진할 것이다’ 61.8%

Q. 과거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번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을 어느 정도 잘 할 것으로, 혹은 잘못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Q. 과거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번 정부가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개선" 추진을 어느 정도 잘 할 것으로, 혹은 잘못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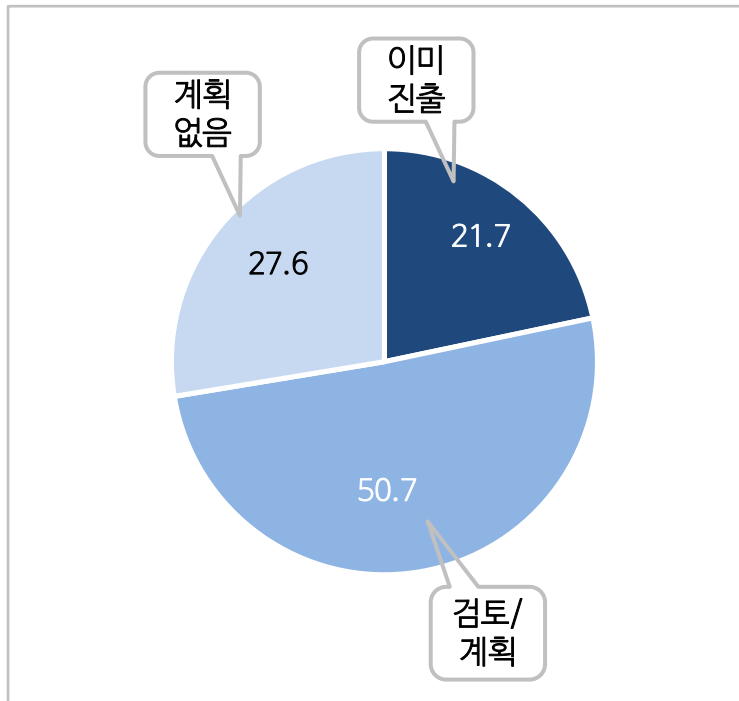


해외 진출 관련 현황

‘해외진출을 검토한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 50.7%, ‘이미 진출해 있다’ 21.7%
진출한 지역 및 진출 예정 지역 모두 ‘동남아’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중국과 일본이 있는 동북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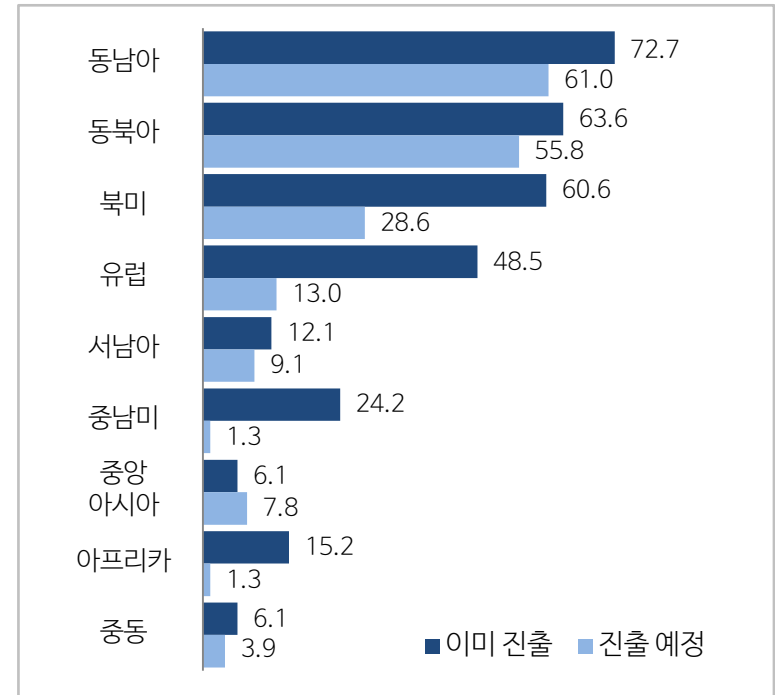
Q. 귀하의 회사는 해외 진출을 하셨거나,
진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Base: 전체응답자, n=152, 단위: %)



Q. 진출했거나 진출예정 지역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해당 지역 모두를 선택해 주세요.

(Base: 이미 진출, n=33, 진출 예정 n=77, 단위: %,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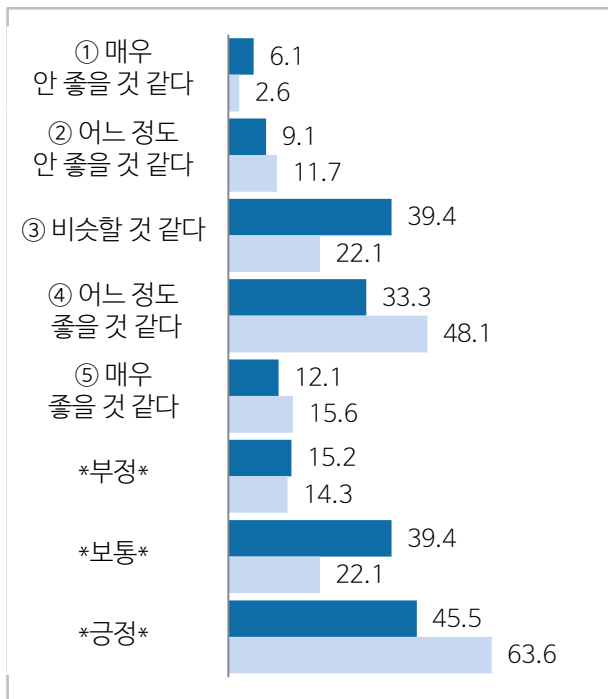


04. 해외 진출 계획 및 진출 지역 환경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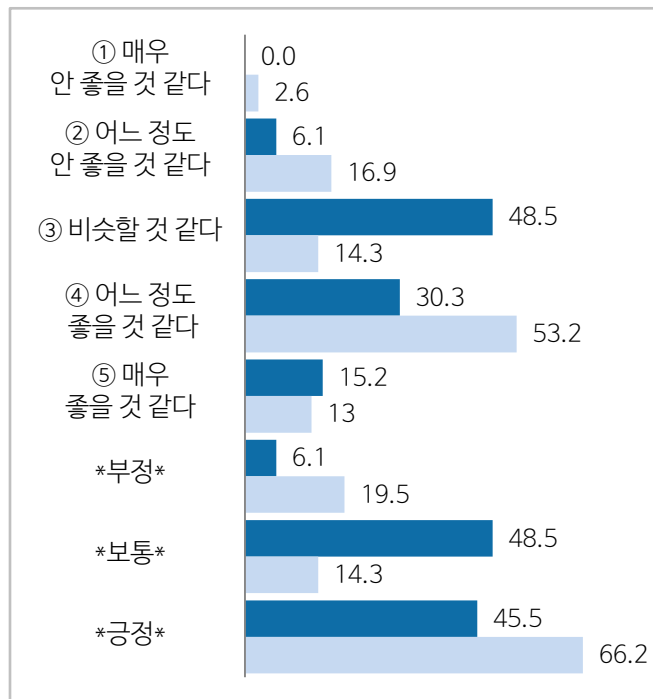
진출(예정) 지역 환경 평가

국내 대비 '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진출 기업 중 45.5% 예정 기업 중 63.6%
 국내 대비 '디지털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진출 기업 중 45.5% 예정 기업 중 66.2%
 국내 대비 '디지털경제 관련 규제'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진출 기업 중 54.5% 예정 기업 중 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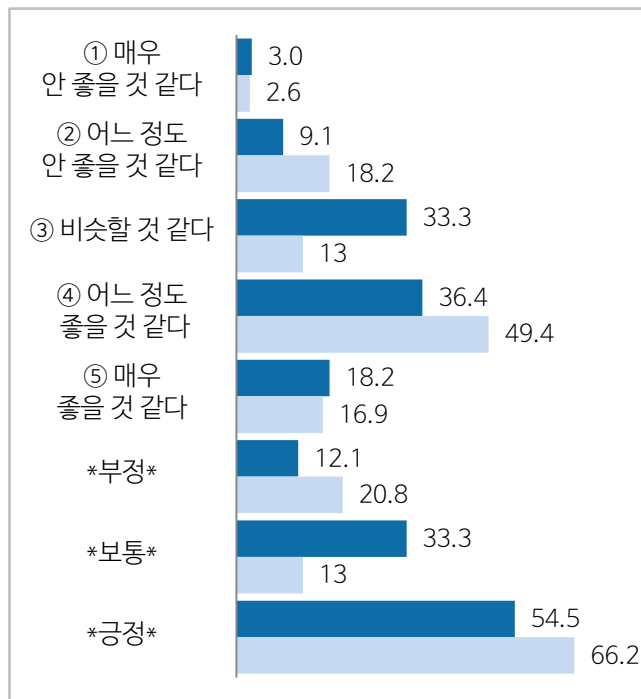
Q. 해외 진출(예정) 시, 한국에 비해
 “신규 창업 및 혁신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은 얼마나 좋았나요, 좋지 않았나요?



Q. 해외 진출(예정) 시, 한국에 비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은”은 얼마나
 좋았나요, 좋지 않았나요?(같나요?)



Q. 해외 진출(예정) 시, 한국에 비해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는” 편했나요?
 불편했나요?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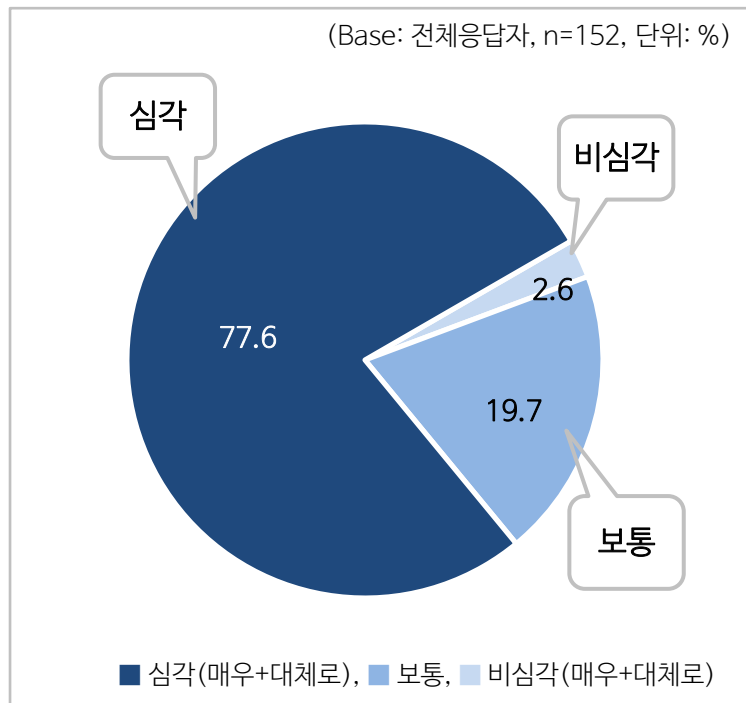


(■ 이미 진출, ■ 진출 예정, Base: 이미 진출 n=33, 진출 예정 n=77, 단위: %,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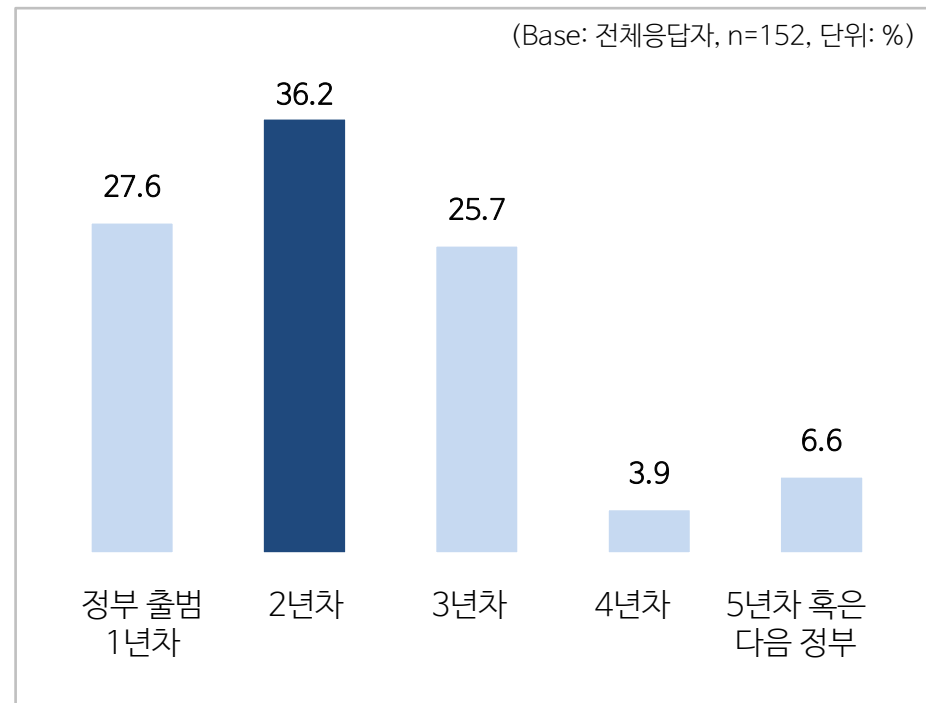
‘역차별 규제’ 심각성 인식

‘역차별 규제 심각하다’ 77.6%
‘역차별 규제, 정부 2년 차에는 해소해야’ 36.2%, ‘4, 5년차 이후’는 10.1%에 그침

Q. 귀하께서는 역차별 규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Q.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이번 정부에서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언제까지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차별 규제’ 관련 전문가 인식(IDI)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역차별 규제’의 심각성은 국내에서 외국 기업의 경쟁력만 강화시켜준다 것

“셋다운제는 완전한 사업자별 역차별 지역간 역차별입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는 규제가 디지털경제에서는 국내 기업만 규제하고 있죠.”

“국내에서 P2P서비스를 예로 들면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해외 기업들은 할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 여부조차 정부에서 모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라는 게 해외카드로 해외 결제를 해버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와 구글에 서비스하는 광고비용이 정부에서 얼마나 생으로 갖고 가는지 이자를 갖고 가는지 수익을 갖고 가는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서비스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역차별 규제예요.”

“이렇게 국내업체들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는 시점에도 해외 업체는 성장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심지어 P2P 업체들 중에 인터넷 은행이 인가 신청 해 놓은 해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셋다운제가 도입된 게 2010년도 2011년도인데 그때 아이폰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구글 애플은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을 견제 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셋다운제 도입을 구글이 받아주지 않아요. 완전한 사업자별 역차별이고 지역간 역차별이고 대표적인 역차별이지요. 셋다운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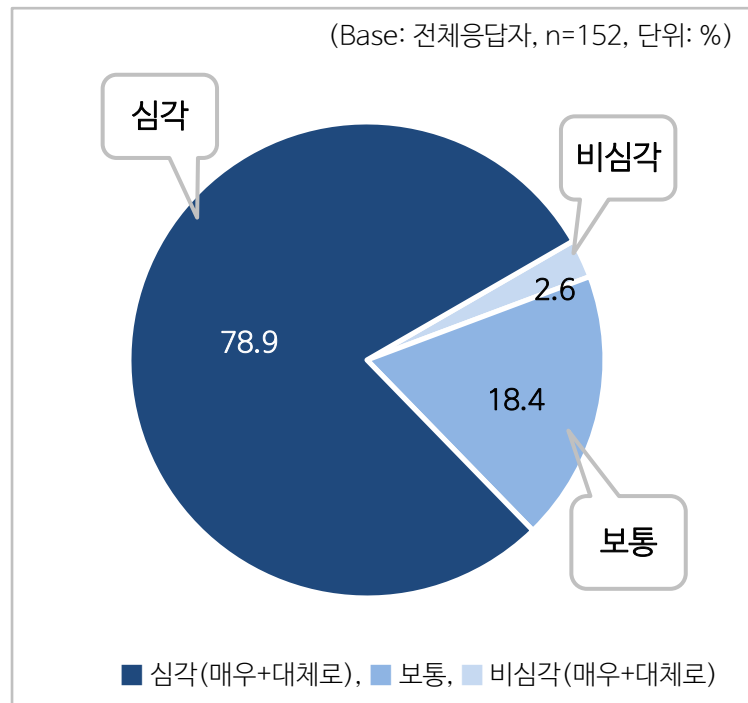
“대부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보면 해외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동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국가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 니까 자기 나라에 없는 법도 지켜야 되니까 진입 장벽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인터넷 산업, 디지털 경제 산업 거꾸로, 국내기업만 각종 규제를 받고 글로벌 기업은 전혀 안 받는 거지요. 회피하는 거지요. 우리는 한국에 진출한 사실이 없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서비스 받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물리적인 공간은 미국 가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미국 법에 따른 미국법인이다 라고 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글로벌 사업자와 역차별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동일한 법과 제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도 4차 산업 혁명이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국 산업과 연관된 강점을 가지고 전략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험조차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다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시험 자체도 할 수 없다는 게 위험한, 계속 누차 말씀드린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봐야 하는데 테스트 자체가 막히고 있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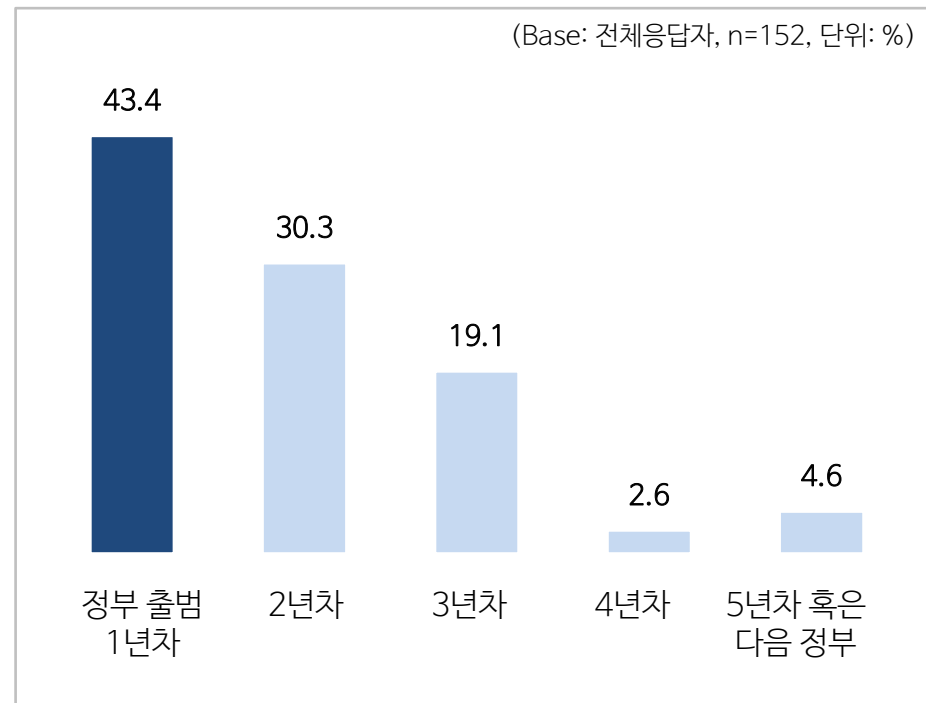
‘그림자 규제’ 심각성 인식

‘그림자 규제 심각하다’ 78.9%, ‘심각하지 않다’는 2.6%에 불과
‘그림자 규제, 정부 1년 차에 해소해야’ 43.4%, ‘2년차’는 30.3%로 다수의 응답자가 전반기 해결 원해

Q. 귀하께서는 그림자 규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Q.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이번 정부에서 이러한 그림자 규제를
언제까지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자 규제’ 관련 전문가 인식(IDI)

전문가들은 ‘그림자 규제’ 이유를 감독기관의 책임 회피, 그리고 민간위원회의 실질적 지배구조로 파악
“기득권 금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책임지게 되니 선뜻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규제하는 근거가 뭐냐? 관습법이라고 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은 금융 쪽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규제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규제들이 기득권 금융을 보호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득권 금융들은 자리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다 금감원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독기관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러한 걸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저희는 기존의 법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다 받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이슈가 없는 것 같지만 진행하려고 질의를 했을 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답변을 해준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선뜻 얘기해주기를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밀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험한 게 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은 데 공문 전달이나 행정지도나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형태거든요. 사업자들이 그런 가이드를 매번 사업 검토를 할 때도 법이랑 시행을 검토하지 가이드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이드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 모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빨리 없애야 될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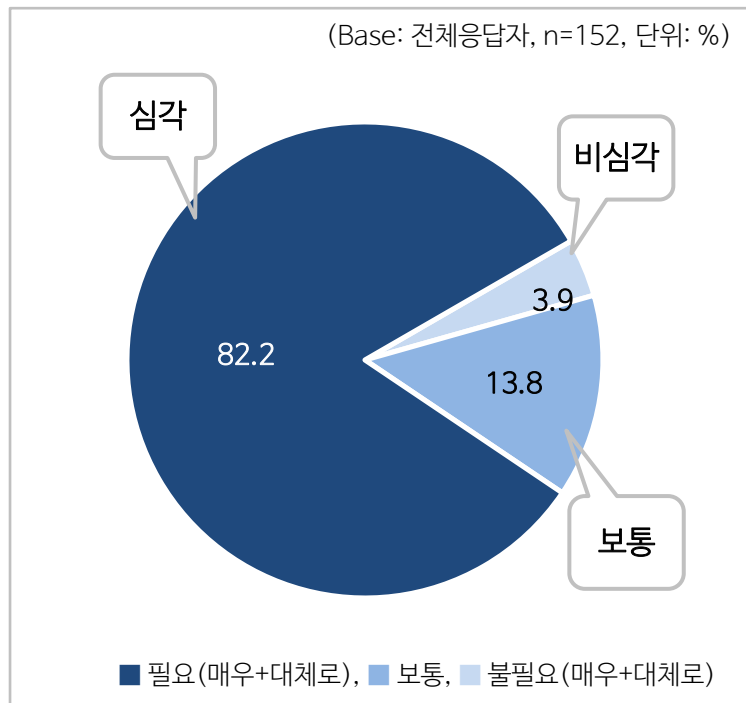
“결제 한도를 물어봤어요. 실무자한테 규제하는 근거가 뭐냐? 관습법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산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관습법이라고 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 결제 한도도 그거예요 명시적인 규제가 없어요 명시형 규제가 전혀 없는데 써 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급 신청할 때 결제 한도 같은 걸 써 내라고 한 뒤에 내부 규정도 없어요 몇 만원 이상 이면 성인 등급, 또는 몇 만원 이상 이면 등급 안 내줘! 이런 정확한 내부 규제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게임물 등급 관리 위원회라든지 영등이라든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의 자율권이 구성되는데 직원들 월급은 공적 재원에서 받아요 물론 공적 재원 방식을 여러 가지로 돌리기는 하는 데 영화물 같은 경우는 영화볼 때 영화진흥기금 떼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금이라는 거지요. 법에 의해서 떼는데 민간 돈이고 그걸로 월급 받는 데 현실적으로 그것에 적절히 참여 안 하거나 아니면 굴복하거나 그랬을 때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기업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게 많다 라고 생각을 하면 따를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림자 규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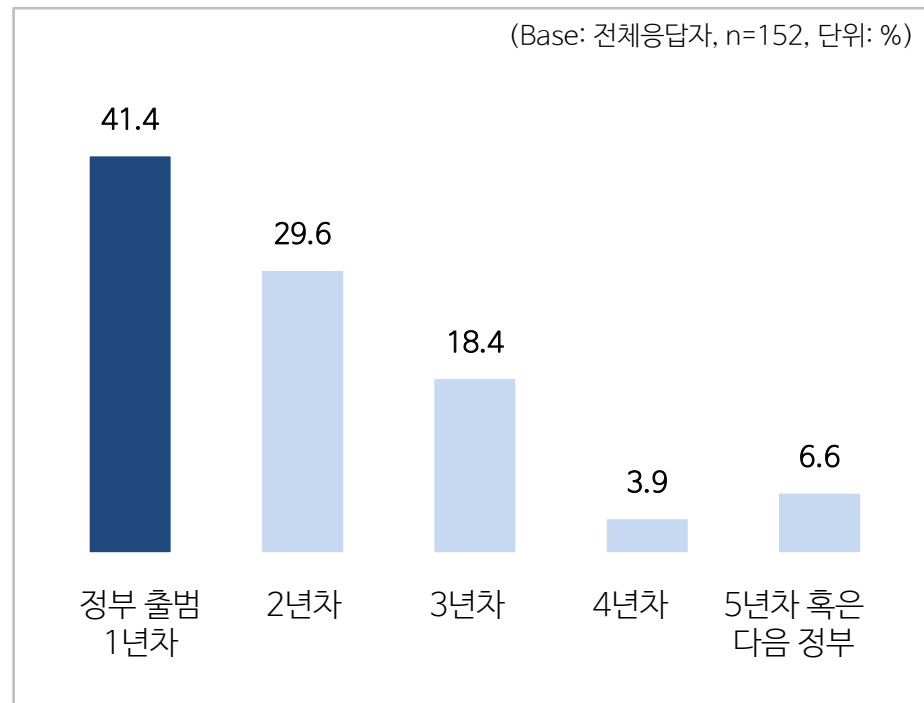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 인식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하다’ 82.2%, ‘불필요하다’는 3.9%에 불과
‘네거티브 규제, 정부 1년차에 도입해야’ 41.4%, ‘2년차’는 29.6%

Q. 귀하께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이번 정부에서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를 언제까지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거티브 규제 전환’ 관련 전문가 인식(IDI)

전문가들이 말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는 새로운 사업 기회의 원천적인 봉쇄임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예 시장 진입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기도 모르니까 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봐”

“사실 그림자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일단 문제가 없으면 하도록 해 주는. 결국은 네거티브 규제와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한다는 건 지도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애매하니까 하지 말라는 행동지도를 하는 건데 이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된다면 일단 해 보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맞물리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부터 조금씩 바뀐 게 무엇이나 하면 그러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비조치 의견서라는 걸 내라. 내가 그걸 조치할 생각이 없다 뭔가 알아서 해도 된다는 것만 해 주면 밑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규제의 해소 방안의 하나로. 좋은 건 아닌데 그 동네는 워낙 심하니까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해 주면 우리가 할게. 그거라도 하자 그런 케이스이고 그게 여러 군데 있어요.”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런 게 소위 이건 해도 되고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건 해도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이건 해도 되고 다른 건 모르겠다. 해도 된다고 하는 건 해!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해도 된다고 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법위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했다가 문제되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게 크거든요”

“일단 서비스를 해 보고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규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반 핀테크기업들과 조금 다른 부분은 무엇이나 하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규제가 없어서 더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규제 만드는 건 좋은데 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풀고 오히려 정부 규제충 완화나 형체를 잡거나 아니면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형태의 규제들은, 방향을 잡아줄 필요는 있다.”

“어떻게 보면 오픈 마켓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픈 마켓은 자율 심의 자체 등급별로 전환된 것도 사실, 처음에는 사전 심의 받으라고 했다가 애플이 게임 카테고리를 달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11년도 12년도에 법 개정해서 모바일은 자체적으로 해라 열어준 배경이 있고. 여기는 국내 피시는 계속 잡고 있었거든요.”

“가장 공감이 갔던 분야는 규제 부분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후보자 시절부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이 맞고요 왜냐 하면 7월 달에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누적 투자 상위 100개 기업을 조사했을 때 국내에서는 40%가 아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30%가 조건부로만 허가가 되어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나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가장 범위가 확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시장 진입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he background image shows a desk setup with a laptop, a pair of glasses, and a pen. A semi-transparent blue rectangle is overlaid on the image, containing the text '03.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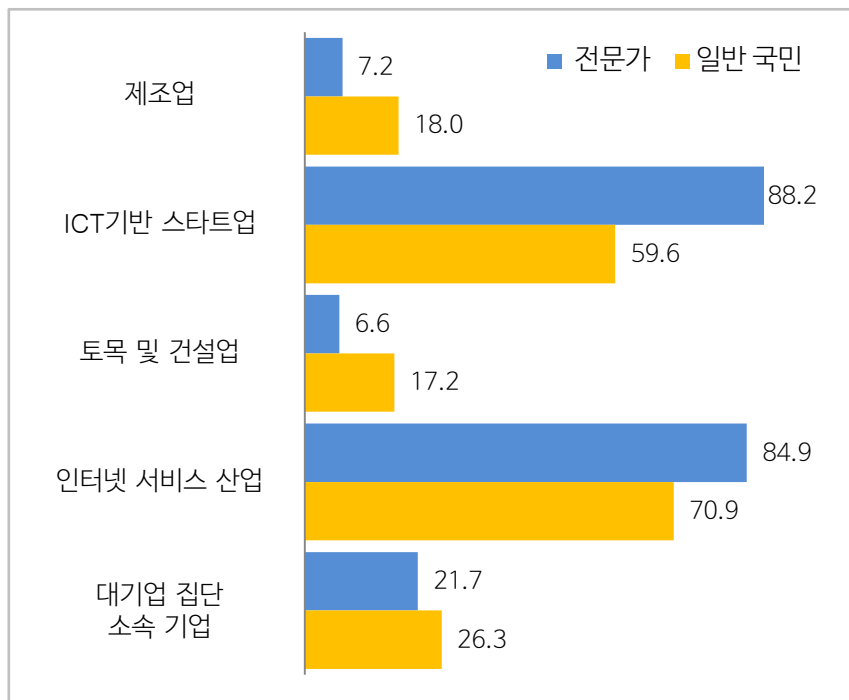
03. 조사 결과 요약

부문별 향후 일자리 전망 및 경제발전 기여도

“제조/토건/대기업” 대비 “스타트업/인터넷” 등 디지털 경제 부문에 대한 긍정평가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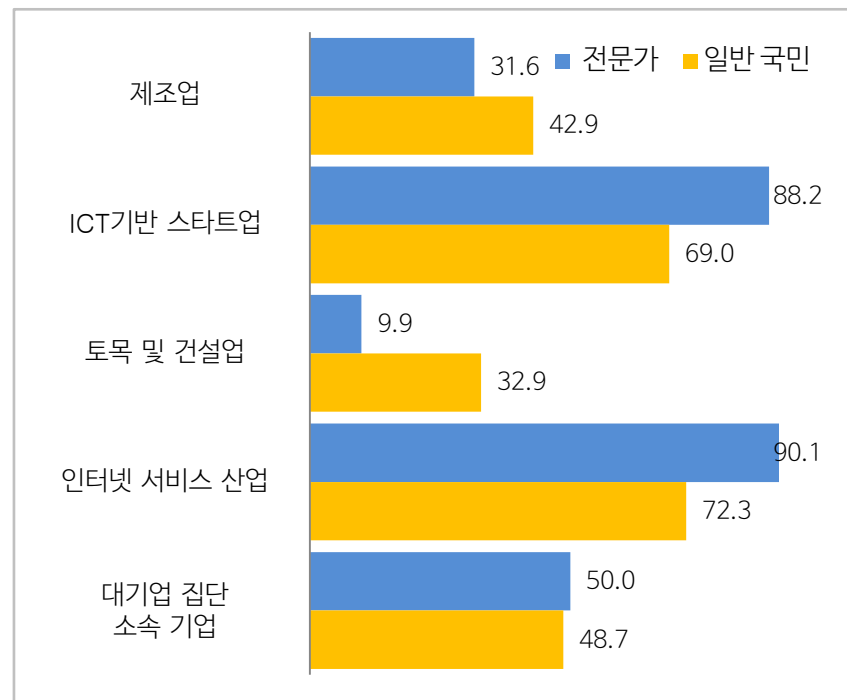
산업 부문별 향후 신규 일자리 증가 전망과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 평가를 디지털경제 산업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에게 동일하게 설문한 결과, 전문가와 국민의 응답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남. 제조업/토목건설업/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증가 전망은 전문가와 국민 모두 27% 미만으로 나타나 기대 응답이 적었으나, ICT기반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 등에는 과반이 59%넘는 높은 기대를 볼 수 있었음.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 평가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 주목됨.

[부문별 향후 신규 일자리 전망]



(Base: 산업계 전문가 n=152, 일반 국민 n=1000명, 긍정 평가 Top2 %)

[부문별 국내 경제 기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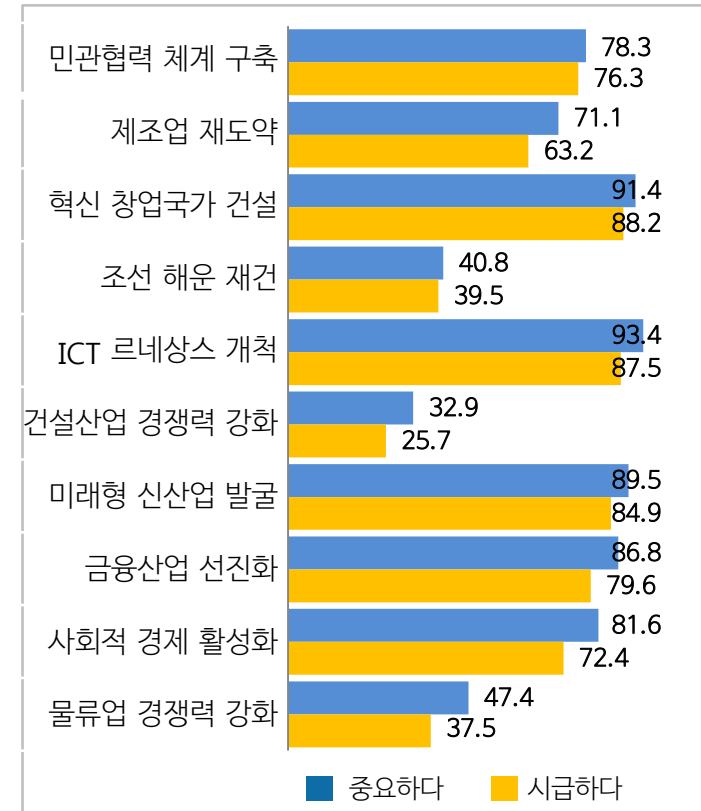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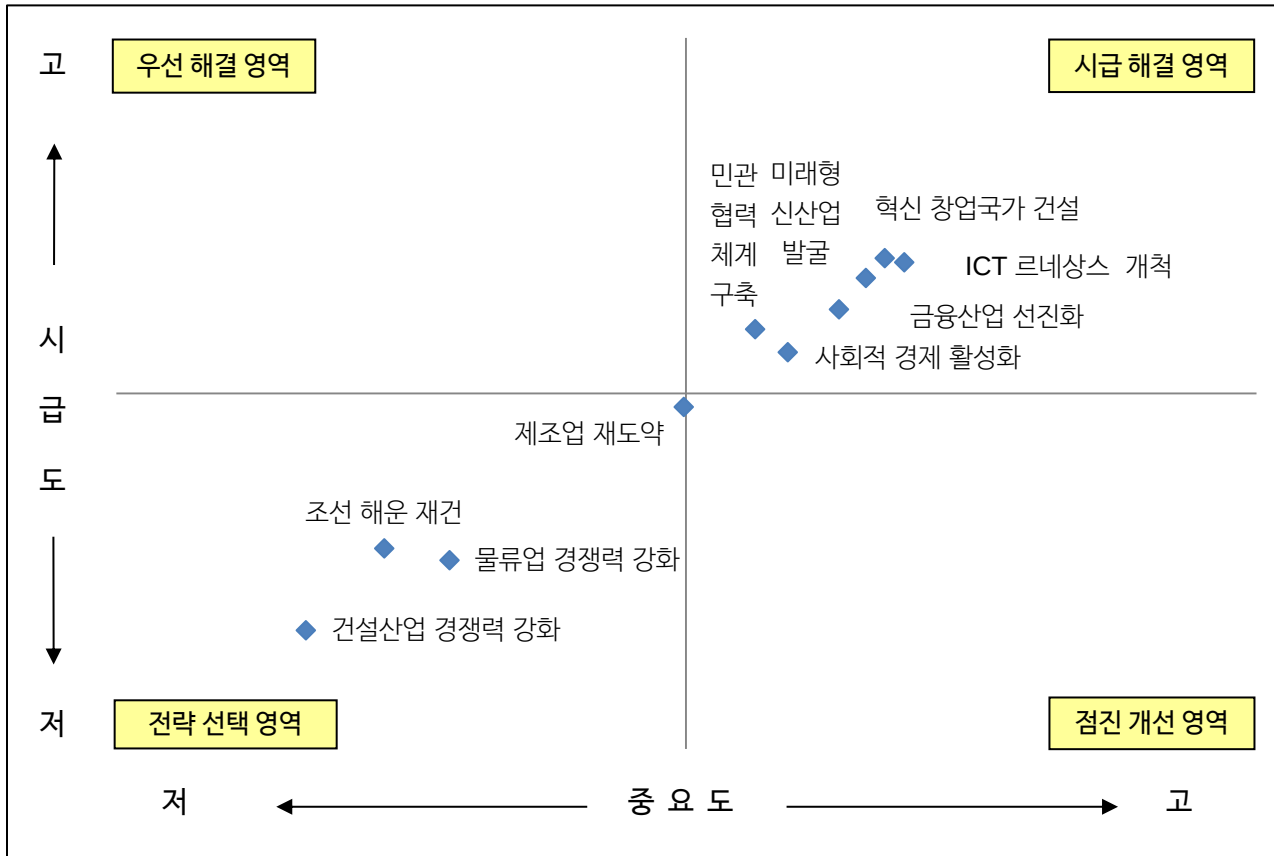


(Base: 산업계 전문가 n=152, 일반 국민 n=1000명, 긍정 평가 Top2 %)

4차 산업혁명 중요도 및 공약 중요도/시급도

“조선/건설/물류” 등 전통 산업 관련 공약에 대한 중요 및 시급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음

산업계 전문가들에게 이번 정부의 주요 10개 공약에 대해 중요한지 시급한지를 물어본 결과, 조선/건설/물류 등 전통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던 산업군 관련 공약에 대해 ‘중요하다’, ‘시급하다’라는 응답이 적었고, ‘혁신 창업국가 건설’, ‘ICT 르네상스 개척’,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은 중요/시급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큰 차이를 보여줌.



(Base: 전문가 n=152, 단위: %)

현정부의 디지털경제 추진 전망, 해외 진출지 여건 평가

산업계 전문가들, 과거 정부 대비 “이번 정부가 디지털경제 관련 더 잘 추진할 것”으로 크게 기대해
그러나, 전문가들의 72.4%는 이미 해외로 진출해 사업하거나 진출을 검토 및 계획하고 있어
이들은 디지털경제 관련 해외의 환경이 국내 대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현정부의 디지털 경제 추진 전망]

- ✓ ‘정부가 과거보다 “신규창업 및 혁신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다’ 73.0 %
- ✓ ‘정부가 과거보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다’ 72.4 %
- ✓ ‘정부가 과거보다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개선”을 잘 추진할 것이다’ 61.8%

[해외진출 현황 및 진출지 평가]

- ✓ ‘해외진출을 검토한 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 50.7%, ‘진출해 있다’ 21.7%
- ✓ 진출한 지역 및 진출 예정 지역 모두 ‘동남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국과 일본이 있는 동북아임
- ✓ 국내 대비 ‘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진출 기업 중 45.5% 예정 기업 중 63.6%
- ✓ 국내 대비 ‘디지털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진출 기업 중 45.5% 예정 기업 중 66.2%
- ✓ 국내 대비 ‘디지털경제 관련 규제’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진출 기업 중 54.5% 예정 기업 중 66.2%

규제 심각성 및 규제 해소 시기에 대한 인식

**역차별 규제, 그림자 규제에 대한 심각하다는 응답은 4명 중 3명 이상으로 많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82.2%가 필요하다고 평가
규제 관련 해소는 정부 출범 1, 2년차 즉 전반기를 넘기기 전에 가시적 성과 필요**

[규제 심각성 및 해소 시기 인식(정량)]

- ✓ ‘역차별 규제 심각하다’ **77.6%**
- ✓ ‘역차별 규제, 정부 2년 차에는 해소해야’ **36.2%**, ‘4, 5년차 이후’는 10.1%에 그침
- ✓ ‘그림자 규제 심각하다’ **78.9%**, ‘심각하지 않다’는 2.6%에 불과
- ✓ ‘그림자 규제, 정부 1년 차에 해소해야’ **43.4%**, ‘2년차’는 30.3%로 다수의 응답자가 전반기 해결 원해
- ✓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하다’ **82.2%**,
- ✓ ‘네거티브 규제, 정부 1년차에 도입해야’ **41.4%**, ‘2년차’는 29.6%

[규제 심각성 인식(IDI)]

- ✓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역차별 규제’의 심각성은 국내에서 외국 기업의 경쟁력만 강화시켜준다는 것
“셋다운제는 완전한 사업자별 역차별 지역간 역차별입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는 규제가 디지털경제에서는 국내 기업만 규제하고 있죠.”
- ✓ 전문가들은 ‘그림자 규제’ 이유를 감독기관의 책임 회피, 그리고 민간위원회의 실질적 지배구조로 파악
“기득권 금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책임지게 되니 선뜻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규제하는 근거가 뭐냐? 관습법이라고 해서 할 말을 ...”
- ✓ 전문가들이 말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는 새로운 사업 기회의 원천적인 봉쇄임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예 시장 진입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도 모르니까 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A background image of a desk with a laptop, a pair of glasses, and a pen. A semi-transparent blue rectangle is overlaid on the image, containing the tex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리서치앤리서치

문의: (02)3484-3025

이동열 팀장 dylee@randr.co.kr

김규화 선임 kyuhkim@randr.co.kr